

기획 ▶5면

InterBEE 2015 폐막

참관기 ▶6면

글로벌 UHD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 참관기

오피니언 ▶7면

[칼럼] 방송기술 엔지니어란 직업의 유효기간

## ‘직권조정 빠진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지상파-케이블 모두 ‘불만’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갈등으로 방송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인 직권조정 조항이 삭제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이 유지됨으로써 정부가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며 불만을 나타냈고, 반대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직권조정 및 재정 제도 조항이 삭제되면서 방통위의 중재 기능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며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직권조정과 재정 제도를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또 그동안 애매하다고 지적된 ‘방송 중단 압박 시라’는 표현을 사

전 통지된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협상이 불발돼 방송이 중단될 경우 30일 내에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21일 △직권조정 △재정 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끊임없이 지적했다.

직권조정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시가 가능하고, 재정 제도는 올림피아나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관련 분쟁의 경우 방통위가 직접 협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가 추진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고 사업자의 사업권 및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더 어렵고 꼬이게 하는 방안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월드컵,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겠다며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권을 훼손한 일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거듭 촉

구했다. 이어 “현재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TV(IPTV) 3개사,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의 재송신 계약 기간은 이미 모두 종료됐지만 채널 공급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협상도 진행 중인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며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서 어떻게 정부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됐는지 전체적인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KNN, 부산MBC, 대구MBC 등 지역방송사장협의회도 성명을 내놓고 “정부가 재송신 영역에 강제 개입하면 자율적인 재송신 질서와 운영 원칙을 무너뜨리고 유료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상 지연 및 협상력 강화만을 만들어내 경영 환경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에 미치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

라며 “규제기관의 불합리한 사적 계약 개입과 이를 통한 지역 방송 고사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의 요구대로 직권조정 및 재정 제도 조항이 삭제된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여전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직권조정과 재정 제도가 없어졌지만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상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개입을 환영했던 케이블 방송사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사업자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데 직권조정 등 핵심 조항이 빠진 방송법 개정안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압박으로 형식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귀추가 주목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 말 많은 ‘통합방송법’ 11월 24일 국무회의 의결

### “유료방송 사업자들 민원 처리에 불과” 지적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방송법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이 유료방송 분야로 한정돼 있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통합방송법은 방송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 유형 및 사업 분류 체계 개선 △진입 규제 완화 △경영 규제 근거 신설 △금지 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번에 상정되는 안은 지난 1여 년 동안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는 사실상 동일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매체가 도입되던 당시 정치, 경제적 여건과 매체에 대한 기대 수준, 사회적 필요성 등이 달랐기 때문에 규제 체계가 달랐다”며 “유료방송 매체들이 성장한 만큼 별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먼저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PP)과 IPTV법상 IPTV 콘텐츠 사업을 PP로 통합해 방송 유형 및 사업을 크게 지상파, 유료방송, PP 등으로 구분했다. 또 주문형 비디오(VOD)나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비실시간 일반 PP가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등록제로 운용했던 PP 관련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 규제도 완화됐다.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 범위가 모호한 직접사용 채널(직사채널)은 공지채널로 한정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직사채널을 불허한 것이다.

직사채널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직접 편성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채널로 케이블과 위성 방송 사업자에게는 허용되는 반면 IPTV법에서는 직사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IPTV 사업자들이 직사채널의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통신 사업자의 여론 독과점 및 유사 보도에 대한 우려로 업계에서도 IPTV의 직사채널 도입에 대해 찬반양

론으로 나뉘는 등 갈등이 심화돼왔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에서 직사채널이 공지채널로 명칭이 바뀐에 따라 유사 보도의 폐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공지채널이란 방송 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하고 편성하는 채널로 보도와 논평, 광고는 금지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합산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를 넘지 못하는 조항으로 이 법안은 3년 후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외에 공정 경쟁 관련 사항도 보완됐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 행위 대상과 유형을 일원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기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방송 업계에서는 방송의 공공성 등 공적 영역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상당 부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2015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 SBS 조삼모 박사, 2015 방송기술대상 수상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2015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이 11월 10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에서 열렸다.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연합회회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영일 KBS 이사, 김석두 KBS 기술본부장, 박영

수 SBS 기술본부장, 신영대 EBS 융합기술본부장, 이경범 CBS 기술국장 등 내외빈 인사와 약 200여 명의 방송기술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창립 28주년 기념식, 2부 2015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방송기술연합회는 KOBTA를 통해 전 세계 방송기술의 흐름을 소개하고 <월간 방송기술>, <방송기술저널> 등을 통해 방송기술의 발전에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 방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수많은 방송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 위원은 “전 세계 방송 산업은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며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방통위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신규 서비스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이후삼 연합회회장의 기념사에서 는 차세대 방송 도입에 따른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유료방송 시장 나아가 미디어 시장 전체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 같은 시장의 변화는 직접수신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진 지상파 방송사에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다”며 “모든 위기에도 기회가 있듯



이 수년 전부터 논란이 돼오던 700MHz 주파수가 방송에 분배된 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SD에서 HD 그리고 UHD로 이어지는 방송의 발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술 발전의 결과”라며 “어떤 전송방식으로 결정되든지 지상파 UHD 방송 자체가 주파수 효율이 높고 직접수신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상파의 매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격동의 KOBETA,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한 국방송기술연합회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기록을 영상에 담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재즈밴드 ‘프로젝트 파이브’의 공연으로 1부 연합회 28주년 창립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2부 2015 방송기술대상에서는 700MHz 주파수 대

역을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주도한 SBS 조삼모 박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연합회는 “조 박사가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국내 시청자 주거 환경을 고려한 광범위한 지상파 UHD 실험방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상파 본연의 가치를 증명하는 등 방송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은 대상 이외에도 △최우수상(KBS 한성희, MBC 장재성, EBS 이준일) 총 3명 △우수상(KBS 이재호, MBC 성시훈, CBS 주창권, 아리랑국제방송 김형순, OBS 허진구) 총 5명 △특별상(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 DTV KOREA) 1명 등 총 9팀에 방송 기술 및 방송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를 인정하고 포상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방송기술용어

## 신호대잡음비 S/N비, Signal-to-noise ratio

신호대잡음비는 수신기, 증폭기를 비롯해 일반 전송계에서 취급하는 신호와 잡음의 에너지 비를 말한다. 신호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잡음과 공존하는데 그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S/N비가 쓰인다. 이론적으로는 수신기나 증폭기의 잡음지수와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개선의 여지는 적다. 그러나 FM이나 PM 방식인 경우는 도래 신호의 크기가 어느 일정 한도 이상이면 복조 신호의 S/N비는 입력의 S/N비보다

개선될 수 있다.

라디오, 테이프리코더, 스테레오 장치 등 청각계의 S/N비는 60dB 이상이 바람직하지만 45dB 정도라도 허용되며 40dB 정도까지 참을 수 있다. 텔레비전 등 시각계에서는 강설형 잡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S/N비 55dB 이상이지만 40dB 정도로 충분히 허용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품 소자나 회로가 개선돼 S/N비는 조금씩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전숙희 sh45@kobeta.com

## EBS 2TV, IPTV에서도 볼 수 있다

11월 21일부터 olleh TV에서 방송 시작



지난 2월 11일 개국한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EBS 2TV를 이제 인터넷TV(IPTV)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EBS는 EBS 2TV가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KT IPTV인 olleh TV(채널 95번)에 방송된다고 밝혔다. EBS 2TV는 KT olleh TV를 시작으로 12월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제공될 예정이다. EBS 2TV의 IPTV 방송은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EBS와 IPTV 3사가 EBS

2TV 채널 동시 재송신에 합의한 결과로 당시 각 IPTV 방송사는 전용회선증설과 채널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EBS 2TV를 동시 재송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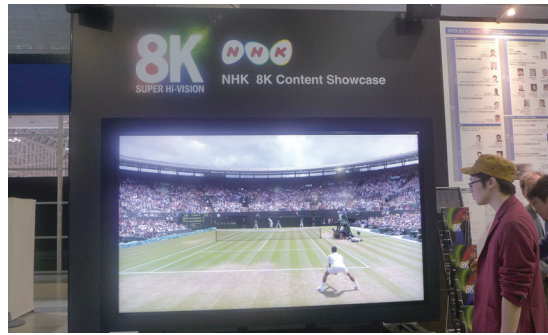
EBS 2TV의 IPTV 3사 동시 재송신이 시행되면 전국 1,130만여 IPTV 가입 가구가 다채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EBS 2TV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상파방송 10~2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 직접수신가구나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공시청 형태로 지상파를 보는 가구뿐 아니라 케이블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들도 4월부터 별도의 안테나 설치 없이 EBS 2TV를 시청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사업자 간의 원활한 협력을 촉진해 케이블 디지털 상품 가입자도 EBS2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 ‘8K-UHD 전송 테스트베드’ 개발된다

“일본과의 8K-UHD 도입 경쟁에서 우위 점할 것”



8K(7680×4320) 초고화질(UHD) 상용화 도입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8K-UHD 전송 테스트베드’가 개발된다.

KBS 기술연구소는 11월 23일 ‘8K-UHD 전송 테스트베드 개발’을 새로운 연구 개발 과제로 선정하고, 공동 개발에 나설 협력사 모집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최신 전송 표준을 반영하는 이중편파 듀얼밴드 송수신기 설계 및 구조 최적화 △10W급 고출력 증폭기를 활용하는 전치왜곡보상기(DPD) 구현 △UHF 대역 내 2개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밴드 기술 구현 △KBS 연구동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는 송수신 정합 실험 및 결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둔 과제로 ▲지상파방송 표준을 준수하는 송수신기 개발 및 납품 실적 ▲지상파 방송용 송신기 역사이터 전치왜곡보상 기술 개발 실적 ▲MIMO-OFDM 기반 초고차변조 송수신 알고리즘 개발 실적 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KBS는 “우리나라도 700MHz 주파수 분배로 지상파 4K-UHD 본방송 도입이 가시권에 있으나 일본은 공영방송 NHK를 중심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8K-UHD 기술 수준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며 “KBS 기술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8K-UHD 기반 기술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까지 이어지는 8K-UHD 도입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총무성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8K-UHD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디스플레이 가진 분야에서는 일본 NHK와 파나소닉이 이미 2012년 5월에 세계 최초로 8K-UHD TV를 개발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일본 샤프가 8K-UHD TV 상용 제품을 출시했다.

또 지상파 전송 분야에서는 2014년 1월 일본 NHK 히토요시 중계소에서 이중편파 MIMO-OFDM 기반 송수신기를 활용해 27Km 장거리 전송 실험에 성공한 바 있고, 올해 1월에는 미즈카미 중계소를 추가 구축해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Single Frequency Network)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일반 가정이나 양관점에서 희망자를 받아 셋톱박스로 8K UHD 시험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과 방송 위성을 활용해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일본 전역에 8K UHD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본은 8K-UHD 본방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며 “일본 총무성과 NHK를 중심으로 자국 TV 제조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8K-UHD 시장 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 기술연구소 측은 본 연구는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동 개발자가 선정되는 대로 기술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mjikang@kobeta.com

##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9일부터 시행 업계, 학계, 정치권 강력 반발…“인터넷 언론 통제 좌시하지 않을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와 학계,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된 인터넷 신문 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개정된 신문법에선 모든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책임자 지정·공개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 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 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치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어뷰징 문제와 유사 언론 문제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언론이 아닌 대부분 중대형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며 “대안 언론이나 1인 미디어 등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대부분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적 보도나 어뷰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 언론 행위 피해 실태 조사’에서도 5인 이하 소규모 언론의 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매체 유형별 언론 중재 조정 신청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언론중재위 통계에 따르면 44.3%에

달하는 8,436건이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중 독립형 인터넷 신문은 전체의 11.8%인 2,245건에 불과하고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의 소위 종속형 인터넷 신문이 32.5%인 6,191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뷰징 문제를 발생시켜온 주범들은 소규모 언론사가 아닌 중대형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닷컴’들이라며 “결국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숨은 의도는 약 6,00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 정리를 통해 언론 통제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언론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 의원 역시 “기자 3

명은 안 되고 5명부터 언론으로 인정하겠다는 여처구내없는 발상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왜 국가가 기자 머릿수를 가지고 언론 인정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며 “결국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보수 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상식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표하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해 대한민국은 인터넷 언론 통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인터넷 신문 등록을 인원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강행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류 언론의 기득권을 강화한 포털제휴평가 위로 인해 풀뿌리 인터넷 신문,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전문 인터넷 신문 등이 고사될 가능성이 높고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가피해졌다”면서 “때문에 정치, 재벌권력과 유착된 주류언론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적 공익을 대변해 온 인터넷 신문을 통한 온라인상의 공론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앞으로 법조계, 언론계 등과 공조해 헌법 소원, 법률 대응,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 지상파-IPTV 3사, 무료 VOD 협상 타결 ‘IPTV와 한 배 탔던’ 케이블 수세 몰려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가 무료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 정산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IPTV 3사와 VOD 정산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공조를 유지해온 케이블 사업자들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와 IPTV 3사는 무료 VOD 콘텐츠 이용 대가를 가입자당 재송신료(Cot Per Subscriber, CPS)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은 총 과금액에는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CPS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되 일정액 이상을 넘지

는 못하게 정액제와 CPS를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8일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의 공공 자산인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시청자를 불모로 한 VOD 공급 중단 압박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재송신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업자 간 합리적 정산 방식이나 제대로 된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VOD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VOD에까지 CPS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최대 2~3배의 요금 인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의 성명 발표는 MBC가 KT를 상대로 VOD 콘텐츠 이용 대가 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월 25일부터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MBC는 KT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무료 VOD(SVOD)에 대해서도 홀드백(일정 기간이 지나면 VOD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기간에 따라 CPS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KT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후 MBC와 KT 간 협상이 진전되면서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들도 각각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재송신 협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 간 협상이 마무리 단

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업계의 관심은 케이블 사업자에게 쏠리게 됐다. MBC는 11월 26일까지 케이블 사업자와 VOD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KBS 역시 11월 2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VOD 공급 중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BS 역시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IPTV 3사가 지상파 방송사와 VOD 협상을 타결했다는 것은 케이블이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거 CPS 협상 때처럼 위성방송, IPTV에 이어 가장 늦게 지상파방송과의 협상에 입할지 아니면 VOD 중단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지 어느 쪽이 됐든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KBS 노조 반대 속에 고대영 KBS 사장 취임

고 사장 “KBS 생존 위기 직면, 크게 변해야”

고대영 사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속에서 제22대 KBS 사장으로 취임했다.

고 사장은 11월 24일 오전 10시 KBS 본관 TV 공개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와 미디어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KBS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KBS가 위기라는 것은 곧 균형 잡힌 여론 형성과 사회 통합 등 공영방송의 목적 또한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무 중심, 고객 중심, 시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고 신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야당이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사퇴”를, 시민사회단체가 “고대영 KBS 사장 임명 원천 무

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미방위는 11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16일 진행된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방위는 우선 전문성 축적, 법과 원칙 중시, 수신료 인상 필요성 강조 등과 고 후보자의 신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동시에 야당이 지적한 고 후보자의 편파 보도 의혹, 청와대 인사 개입설, 통합적 리더십 부족, 공정성 우려 등과 관련해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병기했다.

이날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고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장병완 새정연 의원이 질의한 2011년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서 위증을 진행했다며 이 부분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 후보자는 KBS 보도에서 ‘강원도 선거관 리위원회가 불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민주당이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강원 지역에서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을 축소 왜곡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현장 취재 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2011년 5월 3일 KBS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간에 진행된 ‘공정방송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결과 당시 노조에서는 KBS의 대표적 불공정 선거 보도로 4월 22일 불법 콜센터 관련 보도를 제시하며 사측에 장시간에 걸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공방위에 보도 본부장 자격으로 고대영 후보도 참석해 발언을 했

는데 발언의 적절성은 논의로 하더라도 후보자가 2011년 4월 22일 KBS보도의 불공정 논란에 대한 논의에 깊숙이 참여했고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가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다”며 “그 당시에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진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미방위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위증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자”며 위증에 대한 내용 추가를 거부했다. 이후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지자 장병완 새정연 의원은 “고 후보자가 미방위 회의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미방위는 일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기로 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고대영 KBS 사장 인사청문회

##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공정성 논란’ 도마 위

고대영 “내가 공정했기에 (언론노조 등이) 반대하는 것”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산 참사 축소·편파 보도’, ‘천성관 검찰 총장 후보 국회 위증 특종 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 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 후보 검증 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 보도’ 등 그동안 논란에 휩싸인 고 후보자의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고 후보자는 KBS 새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부적격 후보로 분류한 대표 인사로 불공정 방송의 핵심 인사로 비판받고 있다. KBS 노조와 새노조, 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PD협회 등 내부 직능단체는 고 후보자의 사장 임명 강행 시 총파

업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도 “정권 편파 보도를 주도해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고, 후배 기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고 후보자”라며 “근혜맨인 고 후보자의 입무는 KBS를 집권 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켜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고 후보자가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후보자께서 KBS 사장이 된다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고 후보자는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며 “제가 공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종 조사에서 보면 KBS 뉴스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언론노조 등의 단체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 외압으로 인한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 등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데 지난해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KBS 인사와 보도에 있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

다고 한 것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된다”며 “고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심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 후보자가 과거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있을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방송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고 후보자가) 데스크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지금도 KBS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공정성 논란을 극복할 (내부) 장치를 만들 것인가”라고 물었고, 고 후보자는 “사장부터 실무진까지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BS의 편성 규약을 BBC의 Editorial Guidelines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공정성 시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새누리당 의원들 “수신료 현실화 시급해”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4,000원 돼도 곧 재정 위기 맞을 것”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KBS에 계시는 분들이 수신료의 개념이나 법적 성격,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신료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미 3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으나 패턴이 똑같았다”며 “국회가 끝나

기 2년 전 상정해서 법안소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폐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고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이번에는 다른 구상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저도 KBS 내부 구성원일 당시 진두지휘해왔지만 상당히 어렵다”며 “10년 후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인데 10년 후를 생각해서 수신료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으로 수신료를 어느 정도 인상하면 적

당할지 말하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는 “4,000원으로 인상이 돼도 5년 후에는 다시 재정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KBS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단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케이블 등 뉴미디어의 급속 성장으로 지상파방송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상파방송의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백덕관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고 후보자는 “KBS의 근무 형태가 198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근로제 등을 도입해 시간외수당 등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인건비와 같은 경상 경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중간광고 허용 등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신료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 후보자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과 관련해서는 가전사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지상파 UHD 방송이 도입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K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4,600~700억 원 정도가 될 것인데 저허가 역력이 없다”며 “지상파 UHD 방송 도입으로 돈을 버는 가전사가 UHD 콘텐츠 제작 등에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정부가 산업 지원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 고대영 KBS 사장 인사청문회, 민주당 도청 의혹 놓고 공방

새누리당 “도청할 필요가 있었느냐”

새정치민주연합 “도청에 준하는 녹취”, “부실 수사로 무죄가 난 것”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수신료 현실화를 언급하면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 KBS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고 후보자에게 물었다. 고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며 도청 사실을 부인한 뒤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는 비공개지만

곧 공개된다는 관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허 기자가 도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KBS 기자의 도청 의혹이 제기됐고 저허가 아니라고 밝힐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해당 기자한테 수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KBS가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고 후보자는 “없었다”고 반복했다. 전 의원은 이어 “(KBS 기사가) 당시 증거물품

이었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시를 안 했다”며 “근본적으로 부실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KBS를 모함한 것 같이 발언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KBS 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을 다루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여당 간사께서 시간을 할애해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을 해명케 해주셨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민주당 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전달돼 도청이 확실히 의심됐고, 경찰 수사에서도 도청에 준하는 녹취가 이뤄진 것이 분명

하나 KBS 기자가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해서 무죄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 6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방위 회의에서 천정배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의원이 회의 내용을 도청한 녹취록을 손에 넣은 것이라며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도청 녹취록을 작성한 주체가 KBS 기자로 지목돼 경찰이 KBS 기자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나 수사 착수 4개월 뒤인 11월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KBS 기자는 핵심 증거물인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것으로 교체했다며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자는 당시 KBS 보도본부장으로 도청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고대영 인사청문회 당장 중단해야”

언론시민단체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 개입 의혹부터 밝혀야”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11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 강동순 씨 앞에서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실이 폭로됐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용산 참사 축소 편파 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국회 위증 특종 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 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 후보 검증 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 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 기자 폭행 등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알려왔다”며 “정부는 왜 (이런 인물들)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후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청와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11월 14일 전국에서 모인 13만 민중들의 분노와 언론노조 총파업 찬성 결의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언론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 MBC “이은결 마술 편집, 국정 교과서 풍자 때문 아냐”

## MBC, 새정치민주연합 향해 “정치공세로 편집, 편성권 침해 말라” 경고

MBC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로 MBC의 편집, 편성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MBC는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지난달 25일 인터넷 생방송으로 사전 제작된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자 이은결 씨의 책을 활용한 마술 장면이 삭제된 채 방송된 것을 두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터무니없는 논거

로 MBC의 편집,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11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폭격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준 높은 풍자를 보여준 이은결의 마술은 생방송 당시 시청률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방송에선 분량이 거의 편집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이는 자유로운 감성과 표현의 장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마저 고사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MBC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임의

대로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편집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며 “이은결 씨의 마술이 담긴 해당 영상은 책의 페이지를 알아맞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하고 즐길 수 있는 장면이었을 뿐 ‘국정 교과서 풍자’로만 해석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영상이 본방송에서 삭제된 것은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장면을 찾고 예능 프로그램에 더 부합한 장면을 살려서 편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명

료한 판단 때문”이라며 “5시간 동안의 인터넷 생방송을 녹화해 방송 가능한 분량으로 줄여서 편집해야 하는 제작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난을 위한 비난, 방송 전문 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해를 기초한 부당한 정치적 논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MBC는 “MBC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과 같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해석으로 손쉽게 편집권과 편성권을 침해해도 되는 방송사가 아니다”라며 “외부의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이 있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불편부당한 정도(正道)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 12월 국내 광고경기 추위 타나?

## “최근 내수증가세도 광고비 상승 견인은 힘들 듯”

기업들이 침체에 빠진 수출 대신 내수 진작에 힘을 쏟고 있어 연말까지 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국내 광고 시장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국내 광고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는 ‘광고 경기 예측 지수(KAI, Korea Advertising Index)’에 따르면 12월 종합 KAI는 88.6으로 지상파 TV(86.9)와 라디오(91.7), 신문(95.3) 등 주요 매체 대부분이 10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바코는 “최근 내수 소비가 서비스, 광고업,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 나타내고 있고 소비심리도 다소나마 전월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방어적인 자세로 인해 마케팅 비용 집행에 있어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측면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TV 86.9, 케이블TV 89.2,

라디오 91.7, 신문 95.3, 인터넷 100.5로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을 제외한 4대 매체는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뿜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신문 광고 시장은 겨울방학과 입시철을 맞아 게임, 극장, 대학 및 공공기관 광고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소 활기를 뿜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인터넷에서 동영상 광고는 활기를 뿜 것으로 보이며, 게임 업종은 넷마블, 넥슨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블리자드, COC 같은 해외 게임 업체의 방학기간을 이용한 광고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부동산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아파트 분양 광고도 강세가 예상된다. 반면 이동통신, 수송기기 업종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통신, 자동차 등 대형 광고주의 광고는 약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업종별로 광고 시장 경기가 구분되면서 호황 업종과 불황 업종 간의 양극화 양상도 전망된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 언론노조 총파업,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87개 산하조직 참여, 투표율 71.13%, 찬성 86.67%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노동 개악과 언론 장악 그리고 여론 통제에 맞서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찬성 86.67%로 가결됐다.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는 권리 제한 및 사고 조직을 제외한 87개 본부·지부·분회에서 재적 10,000명 중 7,113명이 참여해 투표율 71.13%, 찬성률 86.67%로 총파업이 결정됐다.

언론노조는 “이번 총투표로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공정 보도 기반을 무너뜨릴 노동 개악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했다”며 “향후 중앙집행위원회 등 조직 내 의결기구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총력 투쟁 계획과 지침을 확정,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앞서 ‘조합원에 게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를 권력의 전리품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번 달에 있을 KBS와 EBS 사장 선임에 깊게 관여를 해 공영방송을 국정 방송화하려고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사용자들 역시 ‘노동악법’에 맞춰 집행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등 이미 공정 보도를 위한 노사 약속이 포함된 단체 협약 무력화, 저성고자 만들기, 상시 퇴출 구조,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보도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 노동조합 무력화 등으로 노사 상생과 사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며 “단결된 힘으로 여론 통제를 분쇄하고 언론 자유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강민정 mjikang@kobeta.com

# “방통위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은 언론 재갈 물리기”

## 한국방송협회 성명서 발표…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 평가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공정성·객관성 등에 관한 감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11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에 부과하는 벌점을 지금보다 최대 2배 늘리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 안전으로 상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내용·편성으로 구성되는 3개의 방송 평가 영역 중 운영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용 및 편성의 비중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방송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의 감점 수준을 강화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이 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감점은 전체적으로 1.5배 강화했고, 공정성·객관성·재난·선거 방송의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로 늘렸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시정 명령,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해당 방송사에는 각각 -1, -2, -4, -10~15의 감점이 부과된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을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공정성·객관성’이라는 모호한 평가 기준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도 그간 자의적인 심의 결과들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여야 6대 3 구조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 공안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검열 기구로 전락한 기관이 방심위”라며 “자신들의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번번이 뒤집히고 있음에도 권력 비판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 여당 편들기 보도는 옹호하는 등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런 방심위에 방송사의 재하가·재승인의 중차대한 평가 요소를 맡기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기’”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또한 정정 보도나 명예훼손 관련 판결 결과를 감점으로 반영시키는 것도 재하가와의 연계성을 약용한 소송과 정정보도 신청 남발로 이어져 방송사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결정이 나면 6점, 법원의 정정 보도·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판결이 나면 8점을 감점하는 대신 방송사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 자문을 받는 등 타당성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3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내세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급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 통제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라며 “방통위는 국회나 여러 언론들의 문제 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금 기준 개선된다

## 정부, 유료방송 사업자, PP 간 ‘이견 팽팽’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유료방송 사업자, PP 간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프로그램 사용료(PP 사용료)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PP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료를 정하도록 해왔지만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1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화관에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이 2015년도까지 적용됨에 따라 향후 규제 지속 여부 등 정책 방향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방안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다수의 PP들이 영세하고 협상력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협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PP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KISDI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PP 사용료 협상의 기본 원칙, 협의 절차, 대가 산정 방식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PP 사용료 지급 기준은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에게서 받는 수신료 매출액뿐 아니라 흡소핑 송출 수수료, 단말 장치 대여 매출 등 PP 채널이 직간접적으로 SO 측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요소까지 포함해 산정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에 대해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PP 채널과 흡소핑 채널이 하나의 번들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PP 채널이 흡소핑 송출 수수료 등 SO 매출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부분은 맞다”며 PP 사용료 지급 기준에 흡소핑 송출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PP 업계는 KISDI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병국 재능방송 실장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비용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라는 사전 전제가 필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KISDI는 또한 PP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SO에서 위성방송, IPTV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SDI 측은 “PP 사용료 지급 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은 IPTV가 시장 진입 초기 단계였지만 지금은 가입자와 점유율 증가로 PP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PP 사용료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O와 위성방송, IPTV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SDI가 내놓은 이 의견에는 대다수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위성방송이나 IPTV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한상진 씨앤앰 전무 역시 “SO의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ISDI가 내놓은 공식에 SO만 넣는다면 PP는 더 불리해질 것”이라며 “위성방송과 IPTV 모두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 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 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할 수 없다”

## 언론시민사회단체 “역사 왜곡, 언론 통제 중단해야” 촉구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하는 데 이어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의 국정화 시도, 여론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통과시키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47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11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언론 통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비밀 TF까지 구성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불공정 편파보도를 심화시킬 인사들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이 더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KBS 차기 사장 후보로 고대영 KBS비즈니스 사장을 선정했다. 고 후보자는 1985년 KBS 공채 11기 기자로 입사한 뒤 정치부 기자,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국장, KBS미디어 감사 등을 역임했으

나 보도국장 재임 당시 KBS 기자협회의 신임 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받은 데 이어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KBS 양대 노조 신임 투표에서 84%의 불신임을 받아 해임된 바 있다. 현재 KBS 노조와 새노조, 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PD협회 등 직능단체는 고 후보자의 사장 임명 강행 시 총파업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EBS도 KBS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 후보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언론계 안팎에서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극우 편향 인사들의 EBS 사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KBS에 이어 EBS에도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이라며 “편향적인 역사관식과 언론관을 가진 부적격자들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맡긴다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는 더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 InterBEE 2015 폐막…HDR, IP, 12G-SDI 등 화두

## 다양한 4K 라인업 강화…“8K 제품은 생각보다 적어”

국제 방송장비 전시회 중 하나인 InterBEE (International Broadcasting Equipment Exhibition) 2015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메세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InterBEE 2015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6개(Hall 1~ Hall6)의 전시관에서 진행됐으며 △InterBEE 포럼 △InterBEE 커넥티드 △InterBEE 아시아 콘텐츠 포럼 4K Theater 등 부대 행사와 드론으로 촬영한 데모 영상을 볼 수 있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규모로만 따지자면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내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인 제25회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5)와 비슷하지만 영상, 음향, 조명, 송출 등 큰 카테고리별로 기기를 나뉘는다면 다양성 측면에서는 KOBA 2015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KOBA 2015에서는 음향과 조명기기가 전시회 전반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던 공간이 많았던 데 반해 InterBEE 2015 음향, 조명기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InterBEE 2015의 최대 화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연 4K였다. 4K 초고화질(UHD)은 올해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세계가전전시회(CES)부터 세계 3대 방송장비전시회인 미국의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2015, 국내 KOBA 2015, 유럽의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2015에 이르기까지 올해 모든 전시회를 꿰뚫는 단어로 InterBEE 2015도 4K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4K와 관련된 많은 기기들이 전시됐다.

### 4K 시장 이끄는 HDR 기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이었다. 자연 그대로의 색상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콘텐츠 제작사들의 욕구와 고사양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맞물리면서 등장한 HDR은 아직 일반인들엔 생소한 기술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하는 기술이다. 강렬한 태양빛부터 밤하늘의 별빛까지 다양한 밝기를 표현할 수 있는 등 기존 UHD TV 보다 한층 더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많은 업체들이 이 HDR 기술을 비교 시연하면서 고화질을 증명해 보였다.



소니는 부스 전면의 Presentation Stage의 LED 전광판에서 시연하는 대부분의 4K 영상에 HDR를 적용해 보다 선명한 화질을 자랑했다. 특히 HDR 감마의 표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ST2084 이외에 NHK와 BBC가 방송 HDR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Hybrid Log Gamma에 대한 시연이 돋보였다. (여기서 ST2084 HDR은 인간의 인지에 기반한 Barten 모델을 기준으로 고안된 HDR로 최대 10,000 칸델라를 출력하는 HDR 방식이고, Hybrid Log Gamma는 상대적인 방식으로 입 출력을 2000%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Hybrid Log Gamma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4K TV 수상기와 하방 호환이 된다는 점으로 Hybrid Log Gamma를 사용해 작업한 HDR 영상을 HDR과 SDR로 같이 송신할 경우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HDR을 지원하지 않는 TV 수상기에서도 휘도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 톤이나 색의 뉘앙스가 없기 때문이다.

캐논도 4K 영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 장치를 전시했다. 30인치 4K 디스플레이 DP-V3010과 함께 오는 12월 발매 예정인 24인치 DP-V2410을 전시하면서 HDR이 적용된 영상과 미 적용된 영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캐논 관계자는 “캐논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RGB LED 백라이트 시스템(RGB LED Backlight System)을 통해 선명하고 풍부한 색상을 재현할 뿐 아니라 눈부심 및 반사를 최소화 해주는 ‘안티 글래어(Anti-glare)’ 표면 처리 기술이 적용돼 광량이 강한 곳에서도 또렷하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고화질 영상 시장 선점하라…4K 카메라 경쟁 심화

4K 고해상도 동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4K 제작 현장에 투입될 다양한 카메라들도 전시됐다.



먼저 고화질 영상 카메라 시네마 EOS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캐논은 4K는 물론 8K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캐논은 방송용 4K 영상 렌즈 4종(CJ12EX, CJ20EX, UJ86X, UJ90X)을 선보였다. CJ12EX는 2/3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광각단 4.3mm-52mm를 실현한 4K 방송용 포터블타입의 줌 렌즈다. 캐논의 독자 광학 설계 기술로 최적의 렌즈 배치는 물론 4K 영상에 대응하는 높은 부품 정밀도와 조립 정밀도를 실현해 화면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색 번짐이나 윤곽의 색 침투를 최소화한 고품질의 4K 촬영이 가능하다.



초감도 카메라인 ME20F-SH도 눈에 띄었다. 캐논의 풀 HD 동영상 특화형 35mm 이미지 센서가 적용된 이 제품은 0.0005룩스의 조도 하에서도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다. 이를 감도로 환산하면 ISO 400만에 달한다. 렌즈 마운트는 캐논 EF로 수십 종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고감도 촬영 외에 일반 컬러 촬영, 풀 HD 60p 동영상 촬영 기능도 지원된다.



“Broadcast solutions with One Panasonic”이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선보인 파나소닉은 새로운 4K MOS 스튜디오 카메라인 AK-UC3000, 3MOS 스튜디오 카메라 AK-HC5000, 4K 다목적 카메라 AK-UB3000 등을 전시했다. AK-UC3000과 AK-UB3000은 최대 3840x2160/59.94p/50p의 UHD 신호를 출력할 수 있으며 HD 동시 출력 가능(최대 1080/59.94p/50p)을 갖춘 1인치 MOS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이중 AK-UB3000은 원격 스튜디오, 날씨 및 교통 보도, 이미지 확대, 스포츠 수행 등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소니는 PMW-F55, PXW-FS7과 더불어 InterBEE 2015를 기점으로 실제 제품 발매 및 배송이 이뤄지기 시작한 PXW-FS5 등을 선보였다. 특히 Grab-and-Shoot 컨셉으로 개발된 PXW-FS5는 S35 4K 센서를 탑재한 콤팩트한 모델로 뛰어난 밸런스를 지닌 다용도 4K 캠코더로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소니는 이외에도 다양한 4K 라인업 캠코더군을 별도의 존에 전시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렌즈 및 촬영 액세서리 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IP 기반 VS 12G SDI ‘팽팽’

또한 올해 초부터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12G SDI와 IP 기반 UHD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 구현 논쟁은 그 우위를 점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했다.

소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기존 SDI(Serial Digital Interface)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IP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비전과 워크플로우를 제시했다. 소니의 IP Live 시스템의 핵심인 Networked Media Interface는 LLVC(Low Latency Video Coder)를 이용해 고품질의 영상을 3:1의 무손실 압축으로 4K 2채널의 영상 신호를 한 가닥의 10Gb 네트워크 케이블로 보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SMPTE ST2002-6 표준을 지원함으로써 IP 환경에서 타 제품과의 연동이 가능하다.

소니는 이외에도 이번 InterBEE 2015에 새로운 카메라 베이스 밴드 프로세서 유닛인 BPU-4500, 세계 최초 4K/IP 라이브 스위처인 XVS-8000, 멀티 포트 라이브 프로덕션 서버 시스템인 PWS-4500에 IP NMI를 탑재해 IP 기반의 라이브 제작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기존 SDI 인프라를 통합한 IP 기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SDI-IP 컨버터도 함께 선보였다.



45주년을 맞이한 FOR-A는 HVS-2000, HVS-

100/110 등 4K 스위처를 전시했으며, 12G-SDI의 MFR-3000GB를 새롭게 선보였다. FOR-A ‘HANABI’ 시리즈 라인업에 추가된 2M/E 비디오 스위처 HVS-2000은 스튜디오, 프로덕션, 이벤트 및 스포츠 Live 중계, 교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100% 충족시켜주는 스위처로 초보자도 손쉽게 조작 가능하다. 특히 InterBEE 2015에서 새롭게 선보인 HVS-2000 본체는 기본 구성으로 24개의 HD/SD-SDI 입력과 18개(16XHD/SD-SDI, 2xHDMI)의 출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HVS-100/110은 HANABI HVS-300HS의 후속 모델로 방송용 급 스위처 중 가장 콤팩트하고 강력한 포터블 비디오 스위처다. 기본 구성으로 입력 단에 4채널의 UP-Resizing 엔진이 탑재되어 HD 환경에서 SD 신호를 혼재해 사용할 수 있다. 또 4K(QFHD) 59.94P를 지원해 4K 제작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12G-SDI의 MFR-3000GB는 4개의 3G-SDI(QFHD)와 1개의 12G-SDI를 혼재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IN/OUT을 편리하게 설정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4K 장비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계측기 등 측정 기구가 많이 등장해 다양한 4K 기기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InterBEE 2015의 수확 중 하나다.



다만 기대했던 8K UHD 장비들은 생각보다 적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을 기점으로 8K-UHD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일본 NHK와 파나소닉이 2012년 5월에 세계 최초로 8K-UHD TV를 개발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일본 샤프가 8K-UHD TV 상용 제품을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일반 가정이나 양관점에서 희망자를 받아 셋톱박스도 8K UHD 시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일본 업체들이 InterBEE 2015에서 다양한 8K 기기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여전히 4K 장비가 주를 이뤘다. 8K 관련 제품은 카메라 정도였으며 NHK 기술연구소의 8K 시연에 만족해야 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 글로벌 UHD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 참관기



정해봉  
YTN IT기술팀 부장

국내 방송기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11월 1일 글로벌 UHD 전문가 양성과정을 위해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 해외 교육의 목적은 향후 지상파 UHD 방송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4K 방송을 시작한 일본 방송 시장을 살펴보고 일본에서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Panasonic, Sony, NEC 등을 방문해 제작 분야의 방송장비 소개와 방송기술 및 정책, 4K/8K의 관련 장비 교육을 통해 한국방송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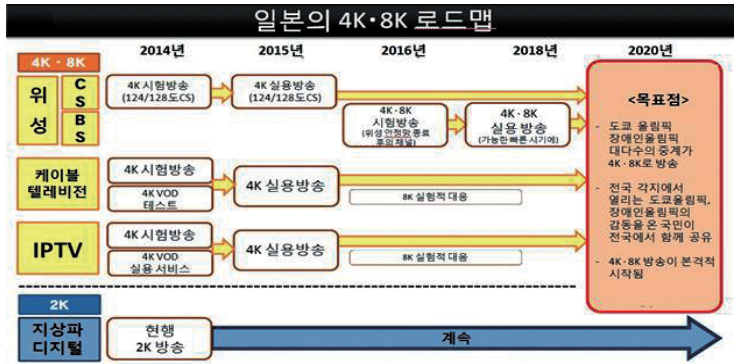
| 일정      | 장소 | 내용                                                                                                                                                                                                                                                                                                                 |
|---------|----|--------------------------------------------------------------------------------------------------------------------------------------------------------------------------------------------------------------------------------------------------------------------------------------------------------------------|
| 11.1(일) | 공항 | 출국(인천공항-일본공항)<br>오후 Panasonic 미팅                                                                                                                                                                                                                                                                                   |
| 11.2(월) |    | Panasonic 방문 및 교육<br>•Panasonic UHD 제품 및 최신 기술 동향 파악<br>•파나소닉 공장 기술 세미나<br>•Panasonic 회사 및 사업 소개(Pana 전체 AVC 사, INBD)<br>•4K → 8K 발전 전략(포함 상품군) 타임 스케줄<br>•4K Workflow<br><br>한국 방송사의 4K Workflow 사정에 따라 설명<br>①VoIP, ②P2Cast<br>•VSBDO 데모를, 신제품 및 기타 제품 소개                                                        |
| 11.3(화) |    | 오전 이동, 오후 Sony 미팅                                                                                                                                                                                                                                                                                                  |
| 11.4(수) | 도쿄 | [Sony 방문 및 교육]<br>•Introduction of Sony 4K Overall<br>•4K Live Camera Introduction(presentation-based)<br>•4K Switcher Introduction(presentation-based)<br>•4K Recording Server(presentation-based)<br>•IP Live System(presentation-based)<br>•4K Monitor and HDR(presentation-based)<br>•4K live system demo, Q&A |
| 11.5(목) |    | NEC 방문 및 교육<br>•4K데모 견학<br>•4K CODEC<br>•Video Server<br>•MTX<br>•NEC 4K 토탈 솔루션 프레젠테이션                                                                                                                                                                                                                             |
| 11.6(금) | 공항 | 입국(일본공항-인천공항)                                                                                                                                                                                                                                                                                                      |

Panasonic은 일본 오사카, Sony는 도쿄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세계 방송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는 경직되거나 딱딱하지 않았고 영업과 개발, 기술 등 관련된 모든 부서가 서로의 의견을 활발하게 소통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고객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고 해소해 주기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힘쓰는 모습이 인상 깊어 보였다.

Panasonic이나 Sony 모두 4K/8K 방송 시장에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방송 Workflow를 세워 놓고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의 HD 방송 시장이 Tapeless 기반으로 이미 옮겨졌고 향후에는 Network 기반으로 옮겨 갈 것을 예상해 새로운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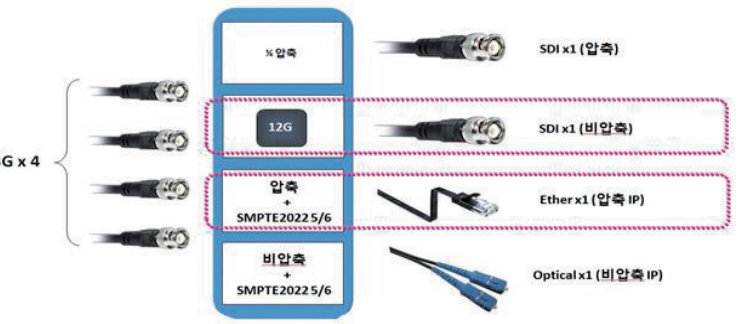
Panasonic의 차세대 솔루션 Cloud Service는 중계 현장에서 4K Camera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Proxy File로 Cloud Server에 전송하면 필요한 곳에서 Proxy File을 EDL로 편집하고 고해상도 촬영 영상은 나중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Sony의 차세대 솔루션 IP Live Production은 4K Camera, Video Server, Production Switcher, Router, Graphic, Multi-Viewer 등과 같은 모든 방송 시스템 장비들을 Network로 묶어 중앙에서 IP Live System Manager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4K/8K에 대한 일본 정부의 로드맵 정책에 따라 일본 제조사 업체들은 장비 개발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다. Panasonic에서는 4K를 지원하는 4K Camera Recorder(AG-DVX200AN), 4K Studio Camera(AK-UC3000), 4K ME Switcher(AV-HS7000), 4K Monitor(BT-4LH310), 4K Project(PT-RQ1 3K) 등이 이미 개발돼 사용 중에 있었고, Sony에서도 마찬가지로 4K Studio Camera(PMW-F55), 4K Switcher(XVS-8000), 4K Recording Server(PWS-4400), 4K Monitor(BVM-X300), 4K Project(SRX-T615) 등이 개발돼 사용 중에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4K로 제작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송출 장비들이 아직 많이 부족해 보였다. 고효율 압축 장비인 HEVC코덱(H.265)을 적용한 4K/8K Encoder(VC-8300)는 현재 일본 NHK에서 35M로 설정해 사용 중에 있었지만, 25M로 다운해 설정했을 때 아직까지는 Quality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H.264 Codec 장비(VC-7710, VD-7710)와 HEVC Codec 장비(VC-870, VD-870)의 특성을 비교 분석했을 때 동일한 Bit Rate에서 HEVC 코덱보다 H.264 코덱 장비의 화질이 더 깨끗하고 좋아 보였다. NEC에서 몇 가지 HEVC 4K Codec 장비를 일부 만들어 생산하고 있지만 4K로 제작된 콘텐츠를 4K로 송출하기 위한 Exciter, MMT(MPEG Media Transport) Multiplexer 장비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일본의 4K/8K에 대한 로드맵을 잠깐 살펴 보면 일본의 Cable TV 및 IPTV 방송은 2014년도에 4K 시험방송을 끝내고 2015년도에는 4K 실용방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8K 시험방송을 거쳐 2020년도에 8K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CS/BS) 방송도 2015년에 4K 실용방송을 거쳐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때에는 일본의 모든 방송국이 본격적으로 8K 본방송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8K 방송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고선명/고화질의 방송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8K 텔레비전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2K•4K•8K가 시청자의 수요에 맞춰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무리 없는 방식으로 원활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로드맵 정책에 따라 4K/8K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제조 업체마다 약간의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과연 4K 전송에 있어서 12G의 대용량을 Baseband를 이용한 SDI로 전송할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이용한 VoIP(Video Over IP)로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다. HD 방송에서 3G 전송은 SDI 한 가닥으로 전송이 가능했지만 4K에서는 12G의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SDI 네 가닥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2G를 4분의 1로 압축해 전송하는 방법과 압축을 하지 않고 SDI 한 가닥으로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IP를 통해 Network 기반에서 압축해 UTP Cable로 전송하는 VoIP 방식과 마지막으로 Optical Fiber Cable을 통해 압축하지 않고 전송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다.



위와 같은 4가지 전송 방식 중에서 Sony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IP 기반으로 한 Network를 통해 VoIP 전송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고, 경쟁사인 Panasonic에서는 기존에 HD SDI 환경에서처럼 SDI 한 가닥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 물론 양사 모두 Optical Fiber Cable로 4K인 12G를 전송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을 Optical Fiber Cable로 구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전송 방식이 좋고, 어떤 전송 방식이 나쁘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두 가지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ony가 고려하고 있는 VoIP 방식인 UTP Cable로 했을 때는 가장 먼저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장점이 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Cable에 대한 거리 제한이 없다는 것과 네트워크 기반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 유지 보수 및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File System과 Live System을 통합 관리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8K로 전환했을 때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Network Trouble로 인한 자료가 없어질 가능성과 지연(Latency)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Panasonic에서 고려하고 있는 SDI 전송에 있어서는 기존 HD-SDI처럼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연(Latency)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리 제한(60m)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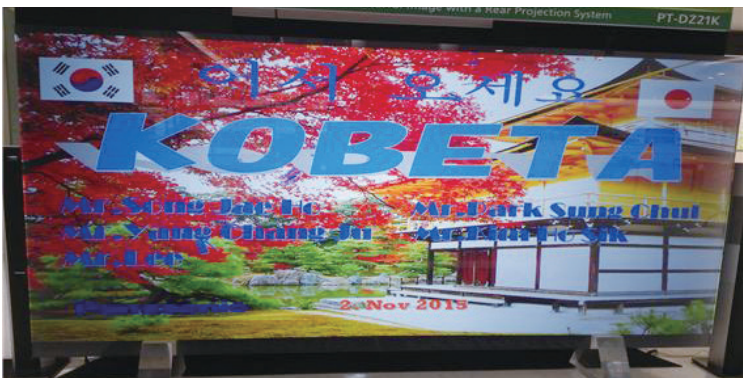
앞으로 2020년도 8K 본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2020년도에 50%가 8K를 시청하고, 2025년도에는 일본 국민의 100%가 8K 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계획이 하나의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의 4K/8K에 대한 로드맵은 단순히 방송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장비 제조사들은 4K/8K가 산업계, 의료계, 문화계, 교



육계 전반에 걸쳐 약 3조 8,000억엔 정도의 일본 시장 규모와 9조 엔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 경제 발전에 엄청난 도움과 놀라운 시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세계 4K/8K 시장은 약 36조 엔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4K/8K에 대한 일본 정부 정책을 방송제조사 업체들은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HD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디지털 전환기만 설치해 아날로그 TV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가 있고, 지상파 직접수신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점점 더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HD 방송이면 충분하지 UHD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글로벌 UHD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4K 방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송 방식에 있어서 정해진 것은 TTA, KO-07, 0123이 지상파 UHD 방송 송수신 정합에 있어서 유일하다고 한다. 유럽식 표준방식인 DVB-T2와 미국식 표준방식인 ATSC3.0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각 지상파 방송사마다 나름대로 UHD 콘텐츠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 방송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는 아마도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도 둘 중 어떤 방식이든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케이블 채널에서 UHD 방송을 시작했고, 지상파 UHD를 본격화하기 위한 실험 방송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방송 시장의 선두주자인 Panasonic, Sony, NEC와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는 4K/8K에 대한 방송장비들을 수없이 개발해 쏟아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상파 UHD 전송 규격이 하루빨리 정해져 그동안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힘들게 쌓아놓았던 한류 문화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끝으로 일본의 UHD 방송 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방송기술교육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낯선 일본 땅에서 5박 6일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5명의 방송기술인연합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방송기술 엔지니어란 직업의 유효기간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이달 초 우리 회사의 기술 부문 직원 몇 명이 명예 퇴직을 했다. 회사 전체 명예 퇴직자 중 약 1/3인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다. 물론 이들 모두 자발적인 퇴직이었지만 '방송기술 엔지니어란 직업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찰리 채플린은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반복된 노동의 후유증을 보여줬다. 채플린은 영화에서 특정 노동행위를 이성에게까지 적용(?)하려다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그나마 이것은 산업 자동화가 도입되기 전의 이야기다. Automation이 일상화된 현대의 공장에서는 찰리 채플린과 같이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없다. '곰 눈알 붙이는' 일만큼은 아직 수작업에 의존하는 것 같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갈수록 점점 더 자동화 레벨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Oxford 대학에서는 자동화 가능성과 관련해 직업별로 요구되는 창의성, 사회 지능 및 기술을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사, 안무가, 사회복지사 등은 미래에도 존속하겠지만 텔레마케터나 세무 대리인 등은 머지않아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향후에 미국에서 뜰 직업으로는 산업심리조직학자, 의학용 초음파 진단기, 유전자 상담사, 정보보호 분석가 등이 있다. 여기서 뜰 직업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자동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미래연구 사례는 실제로 찾아보면 방대하게 존재한다. Machine Learning이나 Deep Learning 같은 인공지능 연구 결과로 기

존의 노동을 대체할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심지어 변호사란 직업의 일정 기능도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방송기술 엔지니어의 ‘사회적 수명’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앞서 언급한 창의성, 사회지능 및 기술을 대입하면 제작기술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미래에는 기자의 영역보다는 PD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기술 엔지니어의 창조적인 역할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송출 관련 기술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IT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보보호 관련 IT 엔지니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

자동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프리랜서와 직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즉,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용되는 방식이 변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긴 일 자리의 양상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쓰고 '비정규직 증가'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직업의 유효기간이라는 측면에서 전자를 '사회적 유효수명'이라 하고, 후자를 '경영적 유효수명'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뭐 특별한 Naming이 아니니까 누구누구의 법칙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방송기술 엔지니어란 직업에는 제작기술, 송출기술, R&D기술 등등이 있으므로 도매금으로 '방송기술 엔지니어란 직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최근에는 IT 관련 엔지니어들이 대거 방송기술 엔지니어로 편입되고 있어서 그 양상을 'A는 B다'라고 칼로 무 베풀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직장에 도입되는 방식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아니 벌써 많이 진행된 것 같다. 이미 몇 해 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신설 채널 위주로 간접 고용 형태가 많이 이뤄졌다. 특히 일부 방송사는 정규 엔지니어는 대여섯 명이지만 파견직 엔지니어는 수십 명인 형태로 조사됐다. 이미 방송 초기부터 '경영적 유효수명' 개념을 많이 도입한 결과다.

그럼 방송기술 엔지니어의 '사회적 수명'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앞서 언급한 창의성, 사회지능 및 기술을 대입하면 제작기술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 것 같다. 일반적으로 미래에는 기자의 영역보다는 PD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기술 엔지니어의 창조적인 역할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송출 관련 기술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IT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보보호 관련 IT 엔지니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운행 중심으로 보면 이미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자동 송출이 주류가 돼 있듯이 유효수명이 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동 송출 과정에서 미묘한 오류를 판정하는 Heuristic(직관적 인식) 기능은 향후에도 대체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방송의 자동 송출 부문에서는 모니터링과 판별을 하는 기능만큼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엔지니어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엔지니어 스스로 진짜 깊은(Deep) 지식이나 사고를 보유했어야 유효기간을 늘릴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Algorithm은 Upgrade가 쉽지만 인간은 그렇게 Upgrade가 쉽지 않다. 어쩌면 앞으로는 방송기술보다는 컴퓨터가 따라오기 어려운 육감(六感)을 키우는 수련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바야흐로 소림사 엔지니어 되기. “아비요오~”

사설

## 재송신 분쟁은 사업자 간 자율 협상으로 해결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행히 직권조정 및 재정 제도 조항은 삭제됐지만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그대로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분쟁이 생겼을 때 직권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협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재송신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부가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지상파는 규제를 강화한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케이블 방송사업자에 8VSB라는 지상파 전송방식을 허용해 준 것이다. 케이블방송의 화질을 개선시킨다는 명분으로 케이블 TV 업계 이익을 대변했으나 결국 저가 유료방송 시장의 고착화로 귀결됐다. 또한 미국만 해도 방송사들의 재송신료 규모가 수십 배 증가한 데 비해 국내의 경우 2007년 IPTV와 재송신료 협상 시 정해진 재송신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친 유료방송 정책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배를 불리고, 지상파 방송사는 적자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 경쟁 사회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채널 및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으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시청권과 고화질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콘텐츠 제값 받기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방송기술저널은 앞서 214호 사설에서도 정부가 사업자 간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협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가 빠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방송재개유지명령권도 지상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아예 없었던 규제가 새롭게 생긴 것도 그렇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창조경제를 이루자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의 근본 취지를 살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또한 직접 개입 없이 어떤 제도적 장치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이후삼  
편집위원 | 백낙운, 이승호, 김명권, 최권용, 나경록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원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7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_COM  
홈페이지 | www.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naver.com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KOBASHOW 2016



26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6.05.24-27  
COEX, SEOUL[www.kobashow.com](http://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